
산업통상부 업무보고

2025. 12. 17.

I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 방향

① '25년 성과 및 보완점

□ 한미 관세합의(11.14)로 대미 통상 불확실성 해소

-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美 관세조치 인하·철폐
 - * 상호관세 25 → 15%, 자동차·부품 관세 25 → 15%, 항공기·부품 관세 철폐 등
- 미측 요구 대비 투자규모 축소 (3,500 → 2,000억불) 및 안전장치* 마련
 - * 연간 한도 200억불 설정, '상업적 합리성' 고려 명문화 등
- 한·미 조선협력(MASGA) 등 새로운 시장 선점 기회 확보
 - * 예: 미국 상선·군함 건조 협력, 미국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 등
- 긴급 자금지원, 관세 바우처, 무역보험 확대 등 관세 피해업종 지원
 - * 자동차 긴급대응 대책('25.4),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 대책('25.9)

□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수출과 국내 투자는 견고하게 성장

- '25.11월까지 지난해 대비 3% 증가, 사상 최초 7천억불 눈앞
 - * 역대 1~11월 수출 순위(연도): 1위 6,402('25) → 2위 6,287('22) → 3위 6,223('24)
- 반도체,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은 사상 최대치 경신 전망*
 - * 반도체: ('24.11) 1,274억불 → ('25.11) 1,526억불 ('24 수출액 1,419억불 既 경신)
자동차: ('24.11) 648억불 → ('25.11) 660억불 ('24. 수출액 708억불)
-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도 지속 증가 추세, 이행률도 양호
 - * ('23) 96조원 → ('24) 114조원 → ('25 계획) 122조원 (3분기 이행률 68%)
- APEC 성공적 개최*, 90억불 투자 유치** 및 최대 수출계약 성과
 - * APEC CEO Summit 1,800여명, K-Tech 쇼케이스 등 부대행사 13,000여명 참가
 - ** (AWS) AI고속도로 등 50억불 투자, (지멘스헬시니어스) 400명 이상 신규채용 등

□ 지역 위기업종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지역경제 회복 기반 마련

-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인 석유화학, 철강산업 사업재편 본격 추진
 - 정부가 구조개편 원칙, 지원방향 先 제시 → 자율개편 강력 유도
 - * 석화 구조개편 로드맵 및 기업 자율협약('25.8),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('25.11)
 - 공정거래 특례, 사업재편 지원 등이 포함된 특별법* 제정, 수소환원 제철 예타 통과('26~'30, 총 8,146억원) 등 친환경·고부가 전환 지원
 - * 철강 특별법 국회 통과('25.11), 석유화학 특별법 국회 통과('25.12)
- 위기업종 소재 지역 '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' 지정으로 회복 지원
 - * (석화) 여수('25.5), 서산('25.8), (철강) 포항('25.8), 광양('25.11)
- 지역 성장의 토대인 '5극 3특 균형성장 전략' 제시('25.9)

□ 제조AI, R&D 생태계 복원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

- 산·학·연 AI 역량 결집 위해 제조AX 얼라이언스(M.AX) 출범('25.9)
 - 앵커기업 중심 첨단 'AI팩토리' 100개 돌파('24. 25개 → '25. 102개)
 - * (S화학) 점검시간 98%↓, (G정유) 연료비 20%↓, (H조선) 작업시간 13%↓ 등
 - 자율주행차, 휴머노이드 로봇 등 임바디드(embodied) AI 본격 추진
 - * K-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('25.11), 휴머노이드 산업현장 실증 개시('25.9) 등
- 역대 최대 규모 '26년 산업 R&D 예산(5.5조원, +18%) 확정

◆ 어려운 여건 속에 거둔 성과에도 불구하고, 근본적 개혁과제 대두

-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경제 활력 저하
- 급격한 기업의 해외투자 등으로 국내투자 위축, 산업공동화 우려
- G2 갈등, 자국이익보호, 산업정책 부활 등 新통상질서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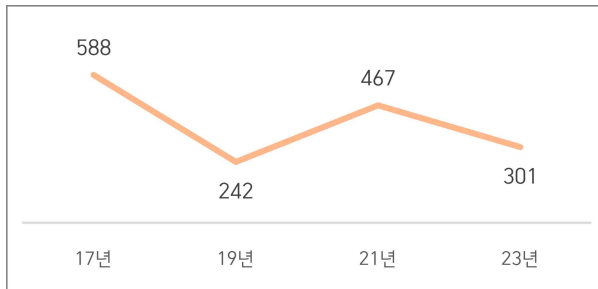
2 대내외 여건

□ 내재적 성장동력이 저하되면서 구조적 저성장 돌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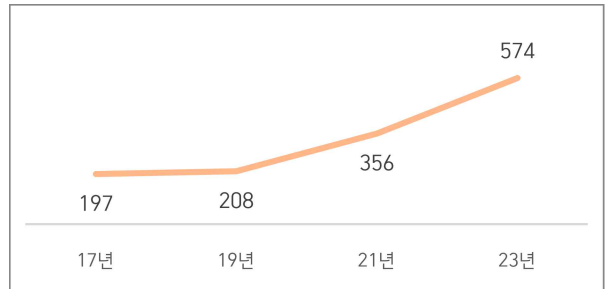
- 생산성* 및 자본기여도 하락, 인구구조 변화 등 기초체력 약화

* 총요소생산성 증가율(%): ('06~'10) 1.0 → ('11~'15) 0.52 → ('16~'23) 0.2

- 기업 성장이 정체되면서 생태계를 넘어 경제 전반의 역동성 약화



< 중소→중견 성장(개사) >



< 중견→중소 회귀(개사) >

- 수도권 1극 체제는 지역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며 불균형 성장 가속

□ 주요국 산업정책 부활로 국내 주력산업 위기감 고조

- 중국제조 2025, 美·日 반도체 재건 등 제조 생태계 경쟁 가열

- 우리 제조업 우위 점차 상실, 경쟁국이 추격·역전

* 제조업 경쟁력 지수('13→'23, UNIDO): (中) 5위→2위, (韓) 3위→4위

** 한중 기술격차('15→'23, 韓 우위): (반도체) 1.2년 → 0.4년, (이차전지) 1.6년 → 0.4년

- 제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조명되고, AI 융합 산업화 경쟁 속도전

- 관세 회피를 위한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, 상대국 정책 변경에 따른 해외 현지 리스크* 확대

* 중국 반도체 공장 VEU 해제,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구금 사태 등
↳ Validated End Us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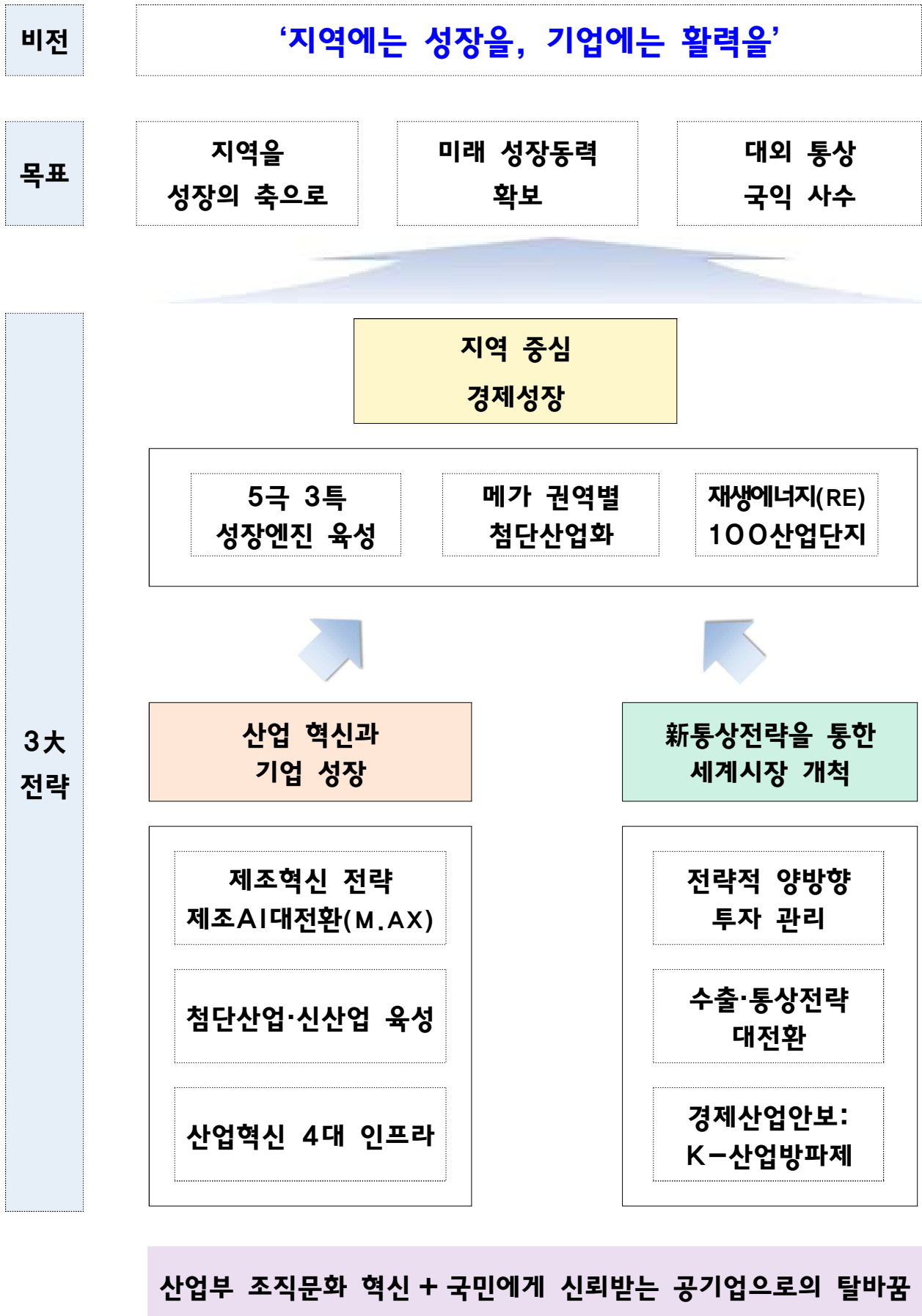
□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무역, 공급망 등 통상 불확실성 지속

- 美 15% 상호관세는 여전히 우리 수출에 부담

- 미·중 기술·자원 수출통제, 공급망 분절은 우리 경제안보 위협

* (美) HBM, 추가 반도체장비 통제조치('24.12), AI칩 통제 강화조치 발표('25.1)
(中) 사마륨, 가돌리늄 등 중희토류 7종 수출통제 시행('25.4)

3 향후 업무추진 방향



Ⅲ. 중점 추진과제

1.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

◇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, 지역이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지원

①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(국정과제 30, 49)

□ 5극 3특 균형성장의 견인차, '성장엔진' 선정

- 권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되 국가 산업정책과 연계
- 주력산업과 新산업을 포함하되 AI·미래모빌리티는 **소** 권역에 적용
- 기업과 소통하고 관계부처·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선정(지방위 의결, '26.2)

□ 선정된 성장엔진 → 범정부 '5종 세트'로 지원

- (세트1: 규제) 권역별 규제프리존 확산 →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지원
 - * 지역의 규제완화 수요 예시 : (자동차) 미래차 도심주행 규제특례, 개인정보 수집 특례
- (세트2: 인재) 지역 인재양성이 기업 유치로 연결되는 **순환** 구조 형성
 - * 권역별 거점 국립대(9개) → 성장엔진 특화 융합연구원 육성 → 인재공급
- (세트3: 재정) 대규모 기업유치와 투자 위한 '**성장엔진 특별보조금***' 도입
 - * 미국 IRA 지원금 수준에 준하는 기업투자 지원금 도입 추진
- (세트4: 금융) 성장엔진 산업에 대한 **과감한** 투자로 글로벌 성장 견인
 - * (국민성장펀드) 150조원의 40% 이상을 성장엔진 육성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
 - * (금융지원) 동남권 등 지역투자공사 설립, 무역보험 한도확대 및 보험료 할인 등
- (세트5: 혁신) 지역 중심의 기술개발, 창업 활성화, 사업화 촉진
 - * 2조원 규모 대형 R&D 추진,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, 창업도시 조성 등

□ 성장엔진 선정 및 지원방안 수립 조속히 마무리

- 지방정부 주도로 기업투자 유치와 정부 지원계획을 담은 '**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**'을 수립하고, 이를 '**초광역 협약**'으로 공표('26.上)

2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화 추진

□ 지역 산업 전반 인공지능(AI) 대전환

- AI팩토리 등 지역 기간제조업의 생산성 제고 위한 제조AX 확산*

* '30년까지 AI팩토리 전국 500개 확산 목표 ('25.11 기준, 102개 보급)

- 지역별 주력 산단을 AI·로봇 기반 M.AX(제조AX) 클러스터*로 전환

* ▲다크팩토리, ▲제조AX 인프라, ▲AI·로봇 생태계 (~'30, 권역별 1개, 총 7개 조성)

□ 5극 3특 권역별 연결을 통해 첨단산업 벨트 조성

-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-부산-구미로 확장하는 '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' 구축

- 패키징 등 유망 분야를 지역 여건*에 맞게 '특화 클러스터'로 조성

* (광주) 반도체 첨단패키징 클러스터 구축, (부산) 전력반도체 생산 허브 육성
(구미) 반도체 소재/부품 생산기지 조성

- 충청-영남-호남을 잇는 배터리 '트라이앵글' 구축

- 기초원료(니켈·리튬) 생산을 위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('26.上)

□ 지역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

- 미래차 실증 거점으로 광주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*로 조성

* (가칭) 피지컬 AI 기반 미래차 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추진

-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생태계 완성*을 위해 첨단 연구원 구축**

* R&D(연구원) - 실증(혁신공정센터 등) - 사업화 지원(연구원) - 양산(앵커기업)

** '30년 개소 목표(국비 1,450억원 + 지방비 550억원)로 사전기획심사제도 추진중

- 대구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협업작업, 물류운반 등 AI 로봇 개발*

* 지역거점 AX 혁신기술 R&D사업: '26~'30년간 1,000억원 이상 투입

3 RE100 산업단지 본격 추진

□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地產地消형 RE100 산단 조성

- 입지: 지방정부가 기본계획 수립 → 정부 위원회(長: 국무총리)가 선정
- 개발: 재생e, 분산형 전력망, 산업시설, 배후 정주시설 연계



- 전력: 대규모 재생e 발전단지 조성, 부지 임대, 설비 저리 용자, 분산 전력망 구축 지원 등 안정적·경제적 재생에너지 공급

□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 지원

- 현존 최고 수준 세제·재정 패키지*, 재생e 구매 등 인센티브 제공

* (세제) 수도권 이전 및 RE100산단 內 창업·신설시 법인세, 취득·재산세 등 감면
(재정) RE100산단 입주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및 국고 보조 비율 상향

- 입주·건축 규제완화, 지방정부 설계형 규제특례* 등 규제해소 병행

* 지방정부+기업이 규제특례 설계 → 정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 완화

- 산업단지 개발 단계부터 주택, 문화, 복지시설을 연계 기획하고,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교육 여건 마련 (범부처 합동)

□ 특별법 제정 후 (잠정 '26.上) 입지를 선정하여 RE100 산단 신속 조성

- ▲기업 수요, ▲부지 및 기반시설, ▲주민 수용성 등 요건을 고려, **시범단지 선정 및 조성계획 발표('26.下)**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

2.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

◇ 제조 AI 대전환(M.AX): 산업과 AI 융합을 통해 차세대 제조 경쟁력 확충

1 제조혁신 전략 'M.AX (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)'

◇ 제조업 생산성 혁신을 속도감 있는 **연결**과 **협업**으로

< M.AX ALLIANCE >

내 용	의 미	내 용	의 미
A dvance	목표는 생산성 ↑·고도화	A cceleration	AI전환은 속도와의 전쟁
L ink	데이터·기술·인력을 하나로 연결	N etwork	모든 주체간 협력 생태계 구축
L everage	풍부한 제조데이터 활용	C onvergence	범정부 정책·자원 융합 필요
I nnovation	AI로 혁신하여 세상을 변화	E xpansion	쉐산업 확장 및 글로벌 진출

□ **M.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업종별 최고 수준 AI 모델과 제품 개발**

↳ 産·學·研 1천개 이상 단체가 참여, 데이터 활용, AI 공동 사업기획 등 수행

○ **첨단 AI 팩토리** 구축*, 양질 데이터 기반 제조 AI 생산 모델 개발

* (현황, '25) 102개 구축 → (목표, ~'30) 누적 500개 이상

○ AI가 탑재된 제품 융합으로 경쟁력 혁신(예: 완전자율운행선박)

□ **공급망 내 수직적 AX 및 지역 산업으로 M.AX를 공간적으로 확산**

○ 공급망 내 대·중·소 협력 AI 선도모델* 15개 구축('26, 60억원)

*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활용 가능한 AI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하는 프로젝트

○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**AX 실증산단*** 13개 조성('26, 260억원)

* AI모델 실증 테스트베드, AI 교육, 컨설팅 등 제조 AI 인프라·서비스 구축 지원

□ **M.AX 필수 투입요소인 데이터, 예산, 규제 개선 등 패키지 지원**

○ **데이터** 수집·가공·활용 위한 기술 확보·플랫폼 구축('26, 116억원)

* 제조데이터 표준화·암호화·비식별화 기술개발, 데이터 공유·활용 플랫폼 조성 등

○ 얼라이언스에서 제안한 **예산사업 우선 반영** 및 **규제*** 신속 개선

* 예: 휴머노이드 산업현장 투입 허용, 자율주행차 원본 영상 활용 허용 등

2 첨단산업 · 신산업 육성 (국정과제 29, 30)

□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

반도체 국내 첨단 마더팩토리, 해외 양산을 통한 세계 1등 초격차 확보

○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

- 자동차, 가전, 로봇, 방산 분야 **수요연계 AI 반도체(NPU)** 개발
- 차량용 **MCU**, 전력반도체 등 **미들텍 반도체** 우선구매 등 국산화
↳ Micro Control Unit
- **‘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’** 설립 등 국내 팹리스 규모 10배 확장
- 반도체 설계인력 역량 제고 위한 **‘Arm 스쿨’** 설립(’26~’30, 1,400명)

○ 「반도체 특별법」 기반, 전용 특별회계 신설(’27)

배터리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보, 해외 양산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

○ 전고체 등 **차세대 배터리** 기술 리더십 확보*

* (R&D) 1,824억원(~’28), (상용화) 성능·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 등

○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**국내 신규 수요 창출**

-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시 **산업 생태계 기여도** 평가(’26)
- 방산, 로봇 등 신규 수요 특화 배터리 R&D 추진(400억원)

자동차 국내 400만대+α, 해외 생산거점을 통한 미래차 시장 선도

○ AI 자율주행 알고리즘, 차량용 반도체, SDV* 플랫폼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(’26, 총 743억원(신규 443억원 포함))

* 車 기능을 SW로 구현+무선 업데이트로 성능 개선(Software-Defined Vehicle)

○ **친환경차 충전 인프라*** 및 **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**(최대 100만원)

* ’26. 전기차 충전기 7.1만기(급속 4,450기), 수소차 충전소 135기 추가 보급

○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(~’30, 200개)에 자금·R&D 등 패키지 지원

조 선 국내 고부가 선종, 美 MASGA 등 해외투자로 제조경쟁력 수성

- **LNG 화물창(KC-2) 실증**, 암모니아 등 차세대 동력체계 핵심기술 확보
- 지역 기자재 생태계 지원을 위한 **수출공급망 보증 프로그램 신설**
- 원자재 구매, R&D 협력, 기자재 실증 등 조선 생태계 강화를 위한 **‘철강-조선’ 및 ‘조선-해운’ 상생협의회** 발족(’26.1분기)

미 래 新산업 육성

바이오 AI 융합 바이오 제조혁신 및 소부장 국산화

- 후보물질 개발-실증-스케일업 등 **바이오 제조AI 혁신 기반*** 조성
*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신규 구축(~’29), 공공 CDMO 장비 고도화(~’30) 등
- 배양 정제 등 **바이오의약품** 공정 **소부장 핵심 품목 국산화**
* 배지, 필터 등 핵심 품목 80개 R&D(총 1,600억원 이상)

방 산 방위산업의 수출 산업화

- 방위산업 첨단전략특화단지 신규 지정(’26.下)
- **캐나다 잠수함 수주**를 위한 G2G 협력안(한-캐 산업협력패키지) 마련
- 차세대 전투기·무인기용 **첨단항공엔진 소재·부품 국산화**
* 항공엔진 모듈(팬, 압축기, 연소기 등) 기술개발(’27~’34, 약 9,000억원)

로 봇 AI 휴머노이드 보급

- AI를 접목한 제조, 유통, 농업 등 **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***
* 휴머노이드 로봇 AX 기술개발 R&D(’26~’30년, 약 300억원)
- 휴머노이드의 AI 학습, 설계, 인증 등 지원 **인프라 확충**
* 휴머노이드 개발혁신센터(’25~’29, 100억원), 안전인증센터(’26, 9억원)

3 산업혁신 4대 인프라 구축

□ 금융: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산업-금융 연계 강화

- 국민성장펀드 본격 출범(12.10) 계기, **1,2~N호 메가프로젝트** 설계
 - 산업부 내 금융전담팀 운영, 지역투자 프로젝트 우선 검토
- **지방투자 연계**, 공정위 사전심사·승인 전제로 반도체 산업 대규모 자금 부담 경감을 통한 투자 촉진 위해 **일반지주회사 특례** 도입('26.上)
 -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 개정, **증손회사 의무지분을 완화**(100% → 50%), **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 허용**

□ 탄소: 산업 성장지향형 그린전환 (GX) 추진

- 산업 업종별 **탄소감축 이행 로드맵** 수립('26~'27)
- 수소환원제철, 전기로 NCC 등 대규모 **감축기술 개발**('27~'36) 및 경매·협약 등 **인센티브 기반 감축투자 지원**('26, 신규 250억원)
- EU 등 규제대응 위한 **탄소 데이터 공유 플랫폼** 구축(~'29, 500억원)
- 「산업 GX 촉진법」 제정(기존 「친환경산업법」 전면 개정)

□ 표준: 국가표준 재정비 및 AI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

- 60년 만에 **KS 인증 전면 개편**, 맞춤형 다품종·소량생산 인증지원*
 - * 공장심사 없는 제품심사 신설, OEM 설계·개발자의 KS 신청 허용 등
- 자율제조, 자율주행, 자율운항 선박 등 **6대 제조AI 표준** 개발

□ 사업재편: 석화, 철강 선례 활용, 산업 재편 프레임워크化

- 구조적 위기 판단시* 업계·지역협의체 공동 구조혁신 계획 마련
 - * 업계와 정부 공동, 기업경영지표 등 분석(사업재편지수 개발 연구용역, '26)
- 지역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'**지역위기 종합정보시스템***' 구축('26.下)
 - * 지역기업 매출·고용·업황 등 지역경제 데이터 통합 관리 → 위기징후 선제 포착

3. 신통상 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

◇ 글로벌 투자 전략성 강화, 수출·통상환경 변화에 공세적으로 대응

① 전략적 양방향 투자관리 (국정과제 37)

국익을 극대화하는 대미투자 관리 체계 구축

□ 대미 전략적 투자 이행 거버넌스 구축

- ‘상업적 합리성’이 보장된 사업 선정을 위한 국내 협력체계 가동
 - 조선(국방), 의약품(복지), AI(과기) 등 관계부처와 실시간 핫라인 구축
 - 산업부 內 사업관리단 구성, 사업 발굴 및 전략적·법적 검토
 - * 사업관리단 중심 투자전략 마련 → 사업발굴·검토 → (美 사업선정후) 사업관리 지원
- 국내적으로 결정된 사업만을 미국이 최종 선정하고, 미측의 유·무형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적극 대미 협의
 - 특별법 시행전 사업 설계 → 시행후 국내 결정 및 미와 본격 협의

□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투자금 회수가 확실한 투자프로젝트 발굴

- 조선을 시작으로 업계와 협업下, 소규모라도 충분한 현금흐름 창출 가능한 모델사업 발굴
 - 조선은 위험도가 낮은 대출, 보증 위주의 협력프로젝트 우선 제안

□ 대미 전략적 투자와 국내 투자를 연계하여 수익 환류

- 기회 최대화, 공정성 원칙 하에 우리 기업 참여 확대
- 참여 수익을 활용한 국내 투자, 현지수요 기자재 수출 등 추진
 - * 무역, FDI, 국내투자 연계 등을 균형있게 포괄하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추진

전략적 외국인투자(FDI) 유치·관리 300억불 초과, 사상 최대 목표

□ **첨단산업 중심으로 프로젝트형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**

- 산업생태계 갭(gap) 분석을 통해 **핵심 유치품목***을 선정, 외국기업 중 관련 핵심기술, 공급망 연관 기업 타겟 설정후 전략적 IR 전개
 - * 첨단산업·공급망·AX·GX 등 4대 분야 중심 품목 발굴·선정
- 현금·입지 지원, 규제 해소 등 **프로젝트 맞춤형 지원패키지** 설계

□ **RE100산단, 첨단특화단지 등 지방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**

- 외국인투자 중점유치입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비율 상향 검토

2 수출·통상 전략 대전환

□ **3대 권역별 통상전략 혁신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**

미·중 안정적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자율성 공간 확대

- 관세협상 타결후 비관세 등 對美 통상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, 원산지 검증, 비자 애로 등 對美 수출·투자 걸림돌 적극 해소
 - 한미 FTA 공동위원회, 한미 비자 공동작업반(WG) 등 협력채널 활용
- 한·중 공급망 핫라인 등을 통해 수출통제 대상 품목 도입 원활화, 한·중 FTA 서비스·투자 협상 타결('26 추진)로 서비스 신시장 개척

일-EU-아세안 전략적 연대·공조로 新통상환경에 능동적 대응

- 新통상이슈(공급망·디지털·기후)와 **첨단산업** 중심 파트너십 강화
 - * (일본) 핵심광물·첨단산업 공급망, 산업의 AI 적용, 지속가능연료 등 협력사업 발굴 (EU) 네덜란드(반도체), 체코(車), 헝가리·폴란드(배터리) 등 맞춤형 협력 논의 (아세안) 디지털 중심 한-아세안 FTA 업그레이드, 한-말련 공급망 MoU 협의 등
- 美·中 리스크 대응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CPTPP 가입 적극 검토
 - * 농수산업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, CPTPP 회원국 대상 우호여건 조성

신흥동반국 전략경제협력으로 시장 다변화 촉진

- ‘UAE·이집트 **순방 후속 범정부 TF***’(12월) 가동, 성과 창출 및 중동·북아프리카로 성과 확산
 - * 민관 합동으로 핵심사업별 추진방안 마련·협의 → 상대국 정상 방한시 합의(’26)
- 서남아, 중남미, 아프리카 등 신흥국 통상네트워크 확대, 상대국 협력 수요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**모듈형 新통상협정*** 추진
 - * 공급망, 그린경제, 디지털, 핵심광물 등 4대 분야, 국별 맞춤형 협정 요소 구성
- 한-중앙아 정상회의(’26.下) 계기 핵심광물·플랜트 협력 강화
- 정상 방문 지역 대상 ‘**정상 경제성과 점검 TF(산업부)**’ 신설

□ 수출품목 다변화로 ‘제2, 제3의 반도체’ 육성

- 원전수출 모델·시장·품목 다변화
 - **한-UAE 협력모델** 기반 원전 **新시장**^{베트남·튀르키예} 공동진출 및 국내 공급망 역량 활용 **대형원전·SMR^{미국} 글로벌 생태계 참여***
 - * ▲한미 전략적 투자 활용, ▲중소 원전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▲국내 기업 원전 수출정보 활용 지원을 위한 AI 출시(’26.上) 등
- K-푸드 등 한류 연계, 700억불 유망소비재* 수출(~’30) 기반 조성**
 - * 식품, 화장품, 의약품, 생활용품, 의류, ** 한류 연계 마케팅, 물류, 인증 등
- 방산·플랜트·전력기자재 등 수출·수주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
 - 유망시장 프로젝트 발굴, 우리 기업 주선, 금융까지 원스톱 지원
- 해외인증·기술규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(’26, 국가기술표준원)

□ 해외 무역장벽에 공세적 대응

- 한국판 **NTE 보고서 발간**, 상대국 시정조치 요구(「대외무역법」 개정, ’26)
 - ↳ National Trade Estimate: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
- **대화채널(장·차관급) 총력 가동***으로 수출·투자애로 신속 해소
 - * 양자 34개(EU+25개국), 복수국 5개 등 총 39개 가동중, 한-인도 산업위 신설(’26)
- EU·캐나다 **철강 수입규제 등 규범위반 소지 보호조치에 전략적 대응**
 - 고위·실무급 대화 지속, 협상력 제고를 위한 레버리지 확보

□ 누구나 손쉽게 수출하는 디지털 통상 인프라 고도화

- **해외 역직구 활성화**로 K-소비재 기업의 글로벌 판로 접근성 제고
* ①역직구 대행, ②글로벌 온라인몰 구축, ③마케팅 지원
- 아세안, EU 등 주요 권역을 연결하는 **디지털 통상협정** 구축
- 판로개척 원스톱 지원을 위한 **무역 AI 플랫폼 구축**(^{가칭}AI수출 비서)

□ 무역지원기관 협업과 혁신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

- 수출기업 협력사 대상 **공급망보증 확대**(’25. 자동차·철강→’26. 조선 등)
- 지역 전시회 육성, 수출바우처, 전시사절단 등 해외진출 지원강화
- 中企 114조원 포함, **역대 최대 무역보험 275조** 공급

③ **경제산업안보: K-산업방파제**

공급망 안보

□ 튼튼한 소재·부품·장비 생태계 강화 및 슈퍼 ‘乙’ 육성

- 핵심 소재·부품·장비의 국내 생산 촉진
 - 경제안보품목 **국내·외 생산차액 보전**(’25. 146 → ’26. 291억원)
 -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재·부품·장비 설비·입지 투자지원금 증액(’25. 1,200 → ’26. 1,700억원) 및 로봇, 첨단엔진 등으로 대상 확대
 - 소재·부품·장비 특화단지* 現 10개에서 10개 추가 지정(~’30)
* 지원 내용: 금융, 기술개발, 입지, 판로 개척, 규제 완화 등 패키지형
- ‘세계 최초, 최고 소부장’ **슈퍼 ‘乙’ 기업** 지속 육성
 - 유망 소부장 기업에 대형·장기 R&D*, 금융 및 특허 등 집중 지원
* 과제당 7년 이상, 200억원 이상
- 수요기업이 직접 소부장 기업을 선택하는 R&D 협력모델*로 전환
* 수요기업이 R&D 성과의 양산라인 도입을 전제로 R&D 과제, 협력 컨소시엄 제안

□ 희토류 등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

- 수급 위기 발생시 컨틴전시 플랜* 가동으로 시장충격 최소화

* 비축물량 대여·방출, 긴급 수입대체, 수급조정조치 가동 등

- **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**에 민관 협력 및 공적 지원 확대

* 민간 발굴 프로젝트 집중 지원, 정책지원 패키지 제공, 맞춤형 국제협력

-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비축 확대, 재자원화 산업 육성

* '26년 재자원화 지원사업 신설(38억원), 순환자원 지정 확대, 할당관세 적용 등

- 희토류 정제련 및 재자원화까지 기술 자립화 추진

* 희토류 R&D 종합전략 수립, 희토류 R&D펀드 조성

기술보호·수출통제

□ 경제안보상 핵심기술 보호 강화 및 관리체계 정비

- 기술변화 트렌드 등을 고려, **국가핵심기술 재조정**

- 조사·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에 기술 유출 감시, 외투 안보심의 강화

- 보안컨설팅, 기술보호 교육 등 취약기업 대상 보안역량 강화

□ 전략적 수출통제 대응

- 미국(AI칩), 중국(희토류) 등 주요국과 **수출통제 협력**

- AI칩·서버 등 불법수출 차단을 위한 부처간 협업* 및 직권조사 확대

* 수출통제 이행 워킹그룹: 산업부, 기재부, 외교부, 국정원, 관세청 등

불공정 무역 대응

□ 석화·철강 등 덤핑 피해 주요 업종에 대해 적기 무역구제 조치

- 우회덤핑 규제대상* 확대, 수입동향 감시 및 관세청과 협력 제고

* (현재) 공급국 內 변경 → (변경) 공급국 제한 삭제, 제3국 조립·가공 추가

□ 조사기법 고도화, 조사인력 전문성 제고 등 무역구제 기반 강화

4. 산업통상부 조직문화 혁신 및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탈바꿈

□ '가짜 일'을 버리고 성과에 집중할 수 있게 '조직문화 혁신'

- 업무 몰입을 방해하는 '가짜 일' 30% 줄이기 프로젝트 추진
 - * '조직혁신TF' 발족('25.10) → '가짜 일' 신고센터 등 도입·운영('25.12)
 - 보여주기식 행사 등 근절, 정책수요자·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
 - * 행사에 민간 고위급 참석강요 금지, 내실 있는 현장방문·간담회 등은 적극 추진
- 직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
 - 적극행정 전담팀 운영,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·인센티브 확대
 -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위임전결 규정 전면 개정('26.1분기)

□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탈바꿈

- (석유공사) 국내외 유·가스전 개발사업 과정상 문제점을 교훈 삼아 절차적 투명성 강화, 국민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조직혁신 추진*
 - * 자원개발사업 추진절차 전면 개선, 정보공개, 소통 등 투명성 강화
- (한전·한수원) 이원화된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*
 - * 대안: ①독립된 제3의 기관신설, ②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일원화, ③기능별 분담 등
 - 최적 대안 도출 위해 연구용역중('25.8~), '26.1분기 결정
- (광해광업)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 출자 확대 및 신규 해외사업 참여가 가능토록 「광업공단법」 개정('26)
 - * 핵심광물 개발프로젝트 발굴·관리 지원, 비축·재자원화를 통해 민간 리스크 분담

□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산업통상부 '조직기능 혁신'

- 산업자원 안보체계 확립 및 제조 AX(M.AX), 한·미 산업협력 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조직기능 대폭 강화
 - * 경제안보산업자원안보실, M.AX산업AI전담국, 대미통상한미통상협력과 등 신설